

###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어떻게 치러지나?

# 세미나·공연·투어 등 다채롭게 진행

모처럼 전북발전에 호기가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재외동포 700만명 중에서 각종 사업을 전개하는 전 세계의 재외동포 기업인 2,000여명과 국내기업인 1,000여명 등 총 3,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이 행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외동포청, 전주시, 전북대학교, 재외동포 경제단체, 중소기업중앙회, 매일경제신문, MBN,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대회 개최장소는 전북대학교 일일오, 개·폐회식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오·만찬장은 전북대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며, 세미나는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에서 열린다. 기업전시는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만들어진 돛형 텐트 내에서 열린다.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이 목을 숙박 시설은 라한 호텔, 베스트 웨스턴 호텔, 신라스테이 호텔, 글로스터 호텔, 왕의지빌 한옥 호텔, 더메이 호텔, 그랜드힐스톤 호텔과 한옥스테이 등을 활용하여 약 3,000여명의 숙박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대회 기간 동안 준비된 공연전시 기획프로그램으로 트롯어벤져스, 고섬섬 무용극과 기타 전통예술 지역 브랜드 공연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전주를 찾는 재외동포 기업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에게 전주의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준비된 투어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새만금 방조제, 산업단지, 고군산 군도 일원을 돌아보는 새만금 투어도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선택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1박 2일 동안 도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과 당일 관광프로그램으로 도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어 관광하고자 하는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한옥마을 투어와 전통문화 체험, 전통주 만들기 및 전통주 먹어보기 체험, 다양한 음식 및 한지 체험, 종향검진, 피부미용, 약침요법, 한약 제조, 양한방 등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모처럼 전 세계에 전북을 널리 알릴 좋은 기회가 되고, 전북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행사가 잘 추진되

고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전북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잘 이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리고, 전북에 소개한 국내 대표 맛집 정보 제공과 전북의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맛 좋고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정찬으로 구성된 오찬과 만찬 등을 준비해 전북자치도를 찾는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기업인에게 다양한 맛과 멋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회 기간에 맞춰 전북자치도만의 자체 특화 프로그램으로 2024 JB-FAIR(우수기업 수출상대회), 2024 전북 일자리 페스티벌, 제5회 지니포럼, 제9회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 2024 전주국제제

론산업박람회, 제22회 전주발효식품엑스포 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행사가 이번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연계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재외동포 기업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다채로운 행사가 치러지도록 준비되고 있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 한 도민은 "전북 전체를 조망하고 전북의 구석구석을 소개하며, 내일만 부분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맛과 멋 등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행사는 없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는 전북도민의 오랜 기간 간직한 특색있는 멋과 맛 등을 전 세계에 널리 잘 알리려 전북발전의 호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익산시장,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민원 주민간담회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은 지난 5일 오후 삼성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소음 및 비산먼지 민원에 따른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익산시의회 김경진 의장, 신용 의원, 정영미 의원과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부서와 시공사 그리고 주민들이 참석했다.

김경진 의장은 간담회에서 도시개발사업과 아파트공사로 유발된 소음과 비산먼지로 고충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했으며, 관련 부서 및 시공사와 함께 주민불편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읍시의회 의장단 소통 의정 행보 본격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제9대 후반기 의장단은 지난 4일부터 양일간 관내 기관·단체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통 의정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후반기 의장단(박일 의장, 이만재 부의장)이 구성되면서 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설명하고, 기관·단체별 현안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의장단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정읍농협, 정읍교육지원청, 전북세남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단체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발전 위한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하수 부의장, 김길수 운영위원장



손종열 자치행정위원장, 염봉섭 경제산업위원장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지난 5일, 제26회 임시회를 열어 부의장과 3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부의장 김하수 의원, 운영위원장 김길수 의원, 자치행정위원장 손종열 의원, 경제산업위원장 염봉섭 의원을 선출했다.

신임 의장단 일원은 "동료 의원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화합하고 배려하는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고, 성숙한 의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도 한 소홀히 하지 않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현안 해결 위해 함께 소통·협력”

김관영 도지사 “도민 체감 도정 혁신 속도감 있게 추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취임 3년차를 맞아 처음 열린 간부회의에서 “당면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실국장과 공공기관장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5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날(4일)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으나 삼기일전해 그간 계획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같은 한 팀이 되어 절박감을 가지고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1월, 취임 2주년 브리핑시 도민과 약속한 사항들이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국장이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또한, 김 지사는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오가노이드 분야 바이오특화단지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그 과정에서 계획했던 사항이 잘 이행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능성과 새로운 각오로 기초를 쌓아가

자.”고 강조했다.

이어,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돼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시기라면서, “도정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상시 소통하여 힘을 모아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기재부 심의가 계속되어 있으므로, 문제사업이나, 부정적인 사업이 있는지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7월부터 하계휴가기간으로, 직원 모두가 건강하고 재충전된 상태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실국장과 공공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여 하계휴가를 실시하되, 업무공백이 없도록 조치할 것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전북자치도는 독자적 테크노밸리 실현과 타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호남권 메카시티 경제동맹 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끝으로, 기재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관련해, “우리 도민의 삶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사진 오른쪽)이 지난 5일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같은 당 추미애 의원에 함께 했다.

##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할 수 있어야”

민주 이성운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공수처 인원 증원 등 법개정안 입법 당위성 주장  
검사·경찰 고위직 범죄 수사 가능토록 개정

지난 5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성운(전주) 의원이 국회 브리핑룸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이 동행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떠안아야 할 아수라관에서 벗어나고, 또 의원들은 무한 토론을 하면서 국회의사당에서 밤을 지새우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의 사실상 '윤석열 특검'이 된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때문에 그렇다.”며, 이러한 원인이 일부 수사외압 당사자들의 잘못으로 돌렸다.

그는 “공수처가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고, 100만이 넘는 국민 탄핵청원도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1일 법사위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종성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

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용산 대통령실과 핵심 관계자들을 당연히 압수 수색 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이러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며, 이들의 수사 행태에 대해 한숨스러워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핵심 증인 두 명은 공수처로부터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임의제출하라는 요구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 후 공수처가 대체 뭐 하는 기관이냐는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다고 주장하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 법무감찰개혁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대로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사 권한과 인력을 가져야 하면, 요즘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너무 적은 것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의 공수처는 실제 사실상 수사 검사 10여 명이 중요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며 인원이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기회에 공수처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했으며, 검사와 수사관의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했다.

또한, “요즘 검찰의 행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주권자인 국민은 제 식구만 감싸는 오만한 검찰을 탄핵하라고 하는데, 검찰의 일부는 집단 반발하며 오히려 국민을 겁박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에서는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범죄에 대해,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던 것에서 이제는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진정한 수사기관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물가상승 못미치는 임금에 청년 공무원 떠나”

전국공무원노조,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무원 노동자의 적정 생활임금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위직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등 6개 단체는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 쟁취 총궐기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 단체들의 깃발 입장으로 시작된 이날 총궐기대회는 이후 각 단체 대표의 공동대회사와 공동결의문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6개 단체는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중민주노동조합,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이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공무원의 적정 생활임금 보장과 하위직 공무원의 저임금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구체적으로 △공무원

임금 기본급 31만3000원 정액인상 △하위직 정근수당 인상 △점심값 1만원 을 위한 정액급식비 8만원 인상 △직급보조비 3만원 인상 등을 주장했다.

참여단체 대표자들은 공동대회사에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봉으로 청년 공무원, 교사가 떠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모였다”며 “정액 인상으로 양극화되고 있는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의 물가인상을 대비 공무원 임금인상을 차이분 6%, 내년 물가전망치 2.1%를 반영한 31만 3000원 정액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며 “이는 더 달라는 것이 아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절박한 요구”라고 했다.

공동결의문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마저 무력화하고 공공부문 예산을 삭감해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고 있다”며 “자문기구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